

## 대통령 후보께 보내는 편지(3)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장 용 근

여러 대선 후보님들 흔들리는 대한민국호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죠?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방관자로서의 자세만 취하고 있는 저로서는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로 가기 위하여 오늘날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복지국가의 방향, 그리고 기타 서민경제적 공약을 쏟아내시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무언인가 헌법학도인 본인으로서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하면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결국 위에서의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복지국가의 방향, 그리고 기타 서민경제적 공약들도 이 조항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들의 공약은 정의에 기초한 문제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공화국은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정신적 원리로서 과거 민족주의나 종교에 기초한 애국심 고취는 이미 우리나라나 선진국가에서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결국 남아 있는 중요한 원리는 법과 원칙에 의한 다스림인 법치로 인류역사는 결론지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이러한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벌들이나 권력자에게는 유전무죄가 적용되고 약자들에게는 무전유죄원칙이 적용되어 아직도 국민들은 진정으로 법의 혜택과는 동떨어져서 법을 멀리서 보고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거 독재자나 왕조에서는 통치의 원리로서 법조인의 숫자를 적게 뽑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어서 권력에 충성하게 하며 국민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지요. 그런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법조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조인은 권력자의 충복이 아닌 주인인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왔지요. 그래서 법조인의 양성제도는 단지 특권층을

배출하는 제도가 아닌 한 나라의 통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정권말에 급하게 도입된 로스쿨은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형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사법시험 숫자 만큼만의 로스쿨합격자를 뽑기 위한 무늬만 사법개혁인 허상이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진정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의 로스쿨이 국민의 대국민 서비스의 진정한 충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면 유지 보완하여야 할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더 이상 잘못된 방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과거 교육과 대국민서비스 수습과정이 없이 단지 사법시험만으로 법조인의 양성하던 시스템을 존치하자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 법조인이 되기 위한 국민과의 접촉과 고민을 전제로 하는 과정이 전제로 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법조인의 양성인 로스쿨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반드시 로스쿨이어야 하나요? 기존의 학부제하에서의 교육과 법조인양성으로서는 불가능하던가요? 물론 다양한 전공의 인재들이 들어와서 법을 배운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학부제하에서 폭넓은 편입제도를 통해서도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현재의 로스쿨교육이 과연 이러한 취지의 부합하나요?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기존과 비교해 보아서도 크게 늘이지 않고 약간 늘이는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로스쿨은 본래의 로스쿨도입취지와는 다르게 로스쿨을 학비는 많이 들고 단지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하는 변태적인 교육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던가요? 결국 변호사 숫자를 기존의 판검사와 변호사 수용이외에 일정수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유사법조인의 수요까지 포함한 사회의 수요에 맞추지 않는 로스쿨개혁 등의 어떠한 사법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날 경제민주화논의가 활발하지요? 그 논의의 중심에는 소비자의 유효한 경쟁하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된 시장체제의 구축이 중심이듯이 사법

개혁도 국민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스쿨의 예처럼 학부시스템과 대학원시스템을 양립하여 어느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는지를 보고 각 대학들로 선택하게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즉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시스템이라는 국가주도의 법조인양성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시장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뽑고 그들이 시장에 거의 다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민주주의적인 시장 중심체제인데 현재의 로스쿨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혀 반대로 교육정책 부서와 법무부 중심의 국가주도로 로스쿨의 숫자도 충분한 준비를 다한 학교도 안되고 단지 대통령과 일부 권력자들의 의도대로 사실상 교육의 독과점이 라는 본래로스쿨의 취지와는 달리 난도질당한 것은 아닌지요?

미국도 초기에 양교육시스템은 양립하였고 그것이 시장에서 로스쿨을 선택하여 로스쿨시스템으로 가게 되었고 반면에 독일도 양립하였지만 미국과는 달리 학부시스템을 선택하였고 옆나라 일본도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양 제도를 양립하여 그 공과 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의 맞는 제도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는 로스쿨과 학부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로스쿨의 성공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교육의 독과점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회제도라는 것은 자연과학적 실험실에서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실험과는 다르게 단지 외국의 제도를 수입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추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장점이 단점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에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보다 로스쿨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이러한 병존적 시스템을 병치하여서 장기적으로 로스쿨시스템과 학부시스템을 병존시켜 그 나라의 현실에 맞는 법조인양성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은 간과하고 단지 로스쿨만의 성공을 위하여 학부제하의 사법시험은 폐지한다는 논리는 로스쿨이 진정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면 타당하지만 아직 사회과학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지금에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비약은 아닐런지요?

저는 로스쿨의 폐지론자가 아니며 로스쿨도입의 진정한 취지에 맞는 대국

민서비스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로스쿨시스템과 학부제하에서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내지는 일본에서와 같은 예비시험제도와 같은 제도를 병존하여 그 결과 시장이 즉 수요자인 국민들이 로스쿨출신자들을 선호한다면 기존의 학부제하의 학교들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로스쿨에 전환할수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렴한 비용의 학부제하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체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병존형은 결코 로스쿨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로스쿨출신 법조인과 학부제하의 법조인을 경쟁하게 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의 대국민서비스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법조인이 시장에서 선택받게 하고 장기적으로 로스쿨체제로 가더라도 그 문제점을 한번 더 점검하여 성공할 수 있는 법조인양성시스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제에는 오늘날 법조인 숫자를 제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편견이 무너진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은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사법시스템의 개혁을 전제로 한 여러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의 변화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선을 위한 허구의 공약보다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